김정관 "1600조 민간투자… 韓 산업 도약의 결정적 기회"

〈산업통상부 장관〉

서울 페럼타워서 기조발표
반도체·AIDC·피지컬 AI 연계
인허가 일괄 처리·특구법 추진
민간투자 규제 해소·인프라 지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9일 경기 성남시 경기기업성장센터에서 열린 'M.AX 데이터 분과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대한민국 경제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꿀 1600조 원 규모의 3대 메가프로젝트(반도체·AI 데이터센터·피지컬 AI)가 단순한 시설 투자를 넘어 국가 산업전환의 핵심 플랫폼으로 본격 도약한다. 정부는 민간의 대형 투자가 지체없이 성과로 이어지도록 규제 혁신과 인프라 지원에 총력전을 펼칠 방침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일 오후 서울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주최 '3대 메가프로젝트: 국가 성장 플랫폼이 되기 위한 과제' 공개포럼에서 기조발표를 통해 메가프로젝트를 새로운 성장 플랫폼으로 구축하기 위한 비전과 실행전략을 제시했다.

김 장관은 기조발표에서 "'메가(Mega)'는 전례 없는 투자 규모와 대한민국 산업이 맞이한 역사적 기회를 상징한다"며 "총 1600조원 규모의 투자계획은 사업 착수연도 GDP 대비 약 60%에 달하며, 이는 경부고속도로 건설 당시 투자 규모(GDP 대비 2.4%)와 비교해도 압도적인 수준"이라며 "대한민국이 미래 글로벌 산업의 선도자로 도약할 결정적 기회"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특히 1600조 원 전액이 민간 투자로 이루어지는 만큼, 기업의 투자가 속도감 있게 집행되도록 걸림돌을 제거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의 역할은 기업 투자가 속도감 있게 집행되도록 걸림돌을 제거하고 필수 인프라와 제도를 뒷받침하는 데 있다"며 "반도체 팹 가동을 2년 이상 앞당기기 위해 인허가 일괄 처리와 초광역특구법 제정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메가프로젝트의 핵심 전략으로 '반도체·AI데이터센터(AIDC)·피지컬 AI'를 연결하는 국가 성장 플랫폼 구축을 제시했다. 반도체가 AI 연산 능력을 공급하고, AIDC가 AI의 학습과 활용을 뒷받침하며, 피지컬 AI가 이를 제조 현장에 적용해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김 장관은 "세 축이 유기적으로 맞물리면 반도체와 AI 인프라 투자가 산업 전반의 제조 혁신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다시 첨단 기술과 미래 산업에 대한 재투자로 확산되는 선순환 생태계가 완성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프로젝트의 실행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4대 추진 전략으로 'M·E·G·A'를 제시했다. 국가 역량을 결집하는 M(Mobilize)과 경제주체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E(Engage)를 통해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G(Generate)와 경제 전반으로 성과를 확산하는 A(Amplify)를 이뤄내어 'MEGA 프로젝트'를 'MEGA 성장'으로 직결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이어진 발표와 토론 세션에서는 3대 메가프로젝트의 청사진이 성과로 이어지기 위한 보완 과제가 제시됐다. 이준 산업연구원 전략산업연구센터장은 메모리 편중 구조를 넘어 시스템반도체와 소부장 생태계를 아우르기 위해 ▲K-Chips Deal ▲BIG 4 짜르(Czar) ▲한국형 반도체 혁신허브(K-IMEC & K-Foundry) ▲산업금융플랫폼 등 4대 정책 브릿지 도입을 주문했다. 박민원 창원대 총장은 공장 데이터와 장인의 숙련 노하우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기업이 주인이 되는 '제조데이터 활용권' 보장과 함께 액추에이터·제어기 등 핵심부품 국산화 및 '다크셀' 기반 인재 양성 체계를, 정병선 서강대 교수는 하드웨어 구축을 넘어 현장의 AI 활용률을 높이는 '에이전트 확산'을 제안했다.

패널토론 좌장을 맡은 이근 중앙대 석좌교수와 토론에 참여한 박건수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 공경철 KAIST 교수, 윤대균 아주대 원장, 백서인 한양대 부교수 등 산학연 전문가들은 전력·용수 선제 공급과 글로벌 경쟁전략 관점의 실효성 있는 집행 단계를 갖춰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각계의 제언을 바탕으로, 3대 메가프로젝트가 대한민국 제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지속가능한 국가 성장 플랫폼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체코 원전 시공협상 결렬에 정부 비상관리

장·차관 매주 사업현안 직접 점검
신규 시공사 선정·후속대책 마련
2029년 착공 등 주요 일정 사수

정부가 체코 두코바니 원전사업 시공계약 협상 결렬에 따른 전체 사업 차질을 막기 위해 비상관리체제를 가동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일 체코 원전사업 시공계약 협상 종료(10월 29일)에 발맞춰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비상관리체제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 원전산업의 핵심 경쟁력인 '정해진 기간 내 예산 내 준공(On Time, On Budget)'의 신뢰가 흔들리지 않도록 사업 실행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고, 유사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비상관리체제는 정부와 팀코리아 참여기업 간의 긴밀한 공조를 축으로 한다. 이를 위해 ▲김정관 장관이 주재하는 '팀코리아 체코 원전사업 추진현황 점검회의'와 ▲차관이 주재하는 '한수원 추진계획 점검회의'를 매주 교차 개최해 현안을 신속하게 조율하고 해결책을 도출할 방침이다.

첫 회의는 이날 오전 박동일 차관 주재로 열렸다. 회의에서는 ▲기존 시공계약 협상 종료에 따른 주요 임무 수행 방안 ▲신규 시공사 선정 절차 및 소요일정 ▲주요 마일스톤 적기 달성 계획 ▲시공계약 관련 후속 조치 이행계획 등이 중점 논의됐다.

특히 향후 예정된 '2027년 4월 건설허가 신청', '2029년 1월 부지정지 착수', '2029년 11월 착공' 등 주요 일정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한 세부계획과 실행방안을 면밀히 점검했다.

김정관 장관은 "한국 원전의 진정한 경쟁력은 개별 기업의 역량이 결집된 '팀 스피릿(Team Spirit)'에 있다"며 "앞으로 많은 원전수출 기회를 대비해 더욱 단단한 팀 코리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분간 장관·차관이 비상관리체제를 직접 가동해 매주 사업현안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부산항, 에너지 자립항만 전환 시동

BPA,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추진

부산항만공사(BPA)가 에너지 자립항만 구축을 위해 '부산항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전략 수립' 용역에 착수한다고 2일 밝혔다. 분산에너지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지역 인근에서 직접 생산하고 소비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되면 에너지 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수요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는 등 규제특례가 적용된다. 공사는 이 제도를 활용해 항만 내에서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항만에서 직접 소비하는 에너지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항만배후단지 내 태양광 발전설비를 늘리고 풍력발전 도입을 검토하는 등 분산에너지 사업모델을 발굴한다. 이처럼 항만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는 게 목표다.



부산항 신항. /BPA

용역에서는 ▲국내외 분산에너지 동향 및 사례 분석 ▲부산항 전력 수요 및 공급계획 수립 ▲항만 특화 사업모델 발굴 ▲사업 타당성 및 규제특례 발굴 ▲참여사업자 발굴 및 선정 지원 등을 수행한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K-스마트팜 싱가포르 진출 발판 마련

공동위원회 설치·기술 교류 확대

농림축산식품부가 싱가포르 정부와 스마트농업 협력을 강화한다. 향후 한국 농산업 기업의 현지 진출 및 K-푸드 수출 확대가 추진된다.

2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김종구 차관은 지난달 30일 싱가포르의 그레이스 푸 지속가능환경부 장관과 만나 스마트팜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국은 이번 협약을 통해 스마트팜 공동위원회를 설치하는 데 합의했다. 또 스마트농업 기술과 정책·정보 교류, 관련 기업·기관 간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김 차관은 같은 날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26차 아세안+3 농림장관회의에도 참석해 역내 식량안보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기조연설에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공동 대응 및 디지털 농업기술 확산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특히 한국이 2013년부터 운영된 '아세안+3 비상쌀비축제'(APTERR)의 누적 물량 78만 톤(t) 중 72%를 기여해 왔고 올해 역시 쌀 5천900t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APTERR은 아세안 지역에서 태풍과 홍수, 지진 등 재난으로 식량 위기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쌀을 비축하고 지원하는 제도다.

김 차관은 데이터 기반 작물 생육 관리와 인공지능(AI) 병해충 예찰, 드론 방제 등 한국의 스마트농업 기술을 소개하고 회원국 간 협력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싱가포르의 실내 수직농장 운영 기업인 그린파이토(GreenPhyto)를 방문해, 자동화·AI 기반 정밀농업 기술로 친환경 엽채류가 생산되는 현황을 둘러보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환경교육도시 10곳 추가

기후부, 전국 광역 3곳·기초 7곳 선정

전국 10개 지방정부가 지역 중심의 탄소중립 사회를 이끌어갈 '2026년도 환경교육도시'로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일 환경교육 추진 실적과 기반이 우수한 광역지방정부 3곳(부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과 기초지방정부 7곳(노원구, 수원시, 안산시, 시흥시, 광명시, 천안시, 통영시) 등 총 10곳을 '2026년도 환경교육도시'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환경교육도시 지정 제도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 기반의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022년 도입됐다.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들은 조례 제정, 자체 계획 수립, 지역환경교육센터 운영 등 전반적인 인프라 구축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세종=한용수 기자

한국 고용서비스 노하우 남아시아에 전수

노사발전재단, 3개국 관계자 21명 초청

노사발전재단이 방글라데시·부탄·몰디브 정부 관계자 21명을 한국에 초청해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날부터 6일까지 닷새간 진행되는 이 연수는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추진하는 남아시아 5개국 공공고용서비스 역량 강화 사업의 일환이다. 재단은 3개국 관계자에게 한국의 공공 고용서비스 정책 및 현장운영 경험을 공유한다.

특히 한국의 공공고용서비스 정책과 현장 운영 사례를 각국의 여건과 비교해 살펴보고 자국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 개선 방향을 모색하게 된다.

교육 내용은 한국의 공공고용서비스 발전 과정을 비롯해 중앙·지역 간 서비스 전달체계, 노동시장정보시스템(LMIS), 디지털 고용서비스 플랫폼 '고용24'의 구축·운영 사례 등으로 구성됐다.

또 인공지능(AI) 기반 고용서비스와 고용행정통계 활용, 직업교육훈련(TVET)과 고용서비스의 연계, 청년 진로개발 지원정책도 다룬다.

한국외국어대 및 서울북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일정도 포함돼 있다. 참가자들은 서울 동대문구 한국외대 진로취업지원센터에서 대학생의 진로설계·취업준비를 지원하는 서비스 운영 사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북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는 구직상담, 취업알선, 직업훈련 연계 등 지역 기반 고용서비스가 구직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을 확인하는 일정이다. /세종=김연세 기자